

‘광주 경리단길’ 동명동 힐링·문화명소로

동구, 다크투어리즘 코스 비롯 상품 개발 박차
전당과 문화재·사적지·맛집 스토리텔링 작업

서울의 경리단길에 빗대 ‘동리단길’로 명성을 얻고 있는 광주 동구 동명동이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새로운 힐링·문화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동명동 ‘카페거리’가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이 광주관광에서 꼭 가보고 싶은 이색적인 문화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해 광주시와 동구는 문화전당과 동명동 일대를 대상으로 구도심의 역사, 근대문화를 엿볼 수 있

는 문화관광 코스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달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총 7개 테마로 동명동과 문화전당권을 잇는 ‘도심관광 트레일’을 운영 중이다. 토요일 오후 2시 5·18 민주광장 시계탑 앞으로 나오면 전문해설사와 함께 각 코스별 2·3시간 가량 소요되는 도보관광에 참여할 수 있다.

동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문화전당과 동명동 일원 문화재와 사적지, 전통가옥, 인물, 맛집 등 관광자원을 전수조사

하고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한 관광 상품 개발에 힘 쏟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옛 전남도청을 비롯한 전일빌딩, 상무관 등 참혹한 참상이 벌어진 역사의 현장을 방문해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관광코스 개발에 나선다.

동명동이 광주의 대표 관광명소로 부상하자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4월부터 개막하는 ‘제4회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중 일부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구는 아시아 문화예술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전당과 민주인권평화의 순례지인 광주민주화운동 사적지,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가득한 동명동의

낭만적인 분위기가 빚어내는 ‘시너지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동명동과 문화전당권 관광코스 성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관광객 유치와 관광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골목마다 개성을 지닌 상점들이 보석처럼 숨어있는 동명동이야말로 문화도시 광주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관광지”라면서 “동명동-문화전당 주변 도보투어코스 정비,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돌아보는 다크투어리즘 코스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즐길 거리를 확충하는 등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봄이 왔나봄...목련꽃 활짝
광주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교정에 화사한 목련꽃이 활짝 퍼 학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있다. /김영권기자

‘조선대 학내갈등’ 학부모가 나섰다

협의회 구성...“자리싸움·사리사욕 급급에 참담”

조선대학교가 학사구조 개편안을 두고 학내 진통이 극심한 가운데 학부모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칭 ‘조선대 학부모 협의회’는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개성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의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조선대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에 진입하지 못하고 위기에 처한 현실인데도 구성원들은 자리싸움과 사리사욕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참담하고 부끄러운 현실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 이상 지역민과 학생·학부모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줘서는

안 되고 교수와 직원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발전을 위해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고, 학생을 위한 장학금 조성과 발전 기금조성 등을 위해 협의회는 다양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협의회는 현지 재학생 학부모 1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학내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학교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조선대는 교육부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되고 학사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총장 직무를 대리하던 부총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이견 노출 끝에 사직한 데다가 대학 구성원들도 반발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민기자

광주고에 ‘4·19민주혁명 역사관’ 개관

생생한 전시와 체험프로 실시

4·19혁명 정신 계승을 위해 광주고등학교에 지어진 ‘4·19민주혁명 역사관’이 개관한다.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 광주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4·19민주혁명 역사관’이 2016년 공사에 들어간 지 3년만인 오는 20일 오후 3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상설전시관의 바다는 4·19민주혁명 당시의 신문기사들로 꾸몄다. 입구 정면은 광주 4·19혁명 최초로 광주고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와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확대 전시했다.

‘광주 4·19, 그 날의 일들’을 주제로 묶인 전시에는 광주 4·19혁명 전개 과정을 시간대별로 게시했다. 3·15장송시위부터 이흥길 하숙집 모의, 광주교 교장실 대치, 타종, 시내시위, 경찰 발포의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다. 또 광주 4·19혁명 주역들인 이병열, 김영용, 윤송웅씨 등



의 증언도 함께 전시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당시 광주 4·19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광주고, 광주공고, 광주농고, 광주상고 등의 학교 교복을 실제로 입고 광주 4·19혁명 주역들의 등신대 옆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 이병열 회장은 “초·중·고 학생들이 역사와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가치를 배웠으면 한다”며 “역사체험장이자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문화놀이터로 기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광주교육청 미세먼지 ‘능장·무능행정’ 도마위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갈팡질팡
공문 폭탄에 학교 현장 ‘마비’
전교조, 시교육감 사과 요구

#최근 신설된 학교들은 대부분 중앙공조장치 방식으로 공기정화와 에어컨 기능이 함께 시설돼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이곳에도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 배부했다 뒤늦게 항의를 받고서야 예산을 환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학생 1만4천여 명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한다며 택배로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비판이 일었고, 한 학교의 경우 최

대 267명에 달하는 학생에게 택배를 발송할 업무로 민원이 발생하자 직접 전달도 가능하다는 수정 공문을 보냈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공·사립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 구입 예산 26억원을 배부했다. 4·6학년 1천734개 교실이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정산까지 마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지난해 학력년에 이어 광주 모든 초등 교실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됐다.

1주일 이상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진 뒤 예야 예산을 배부한 것을 두고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침이 수시로 바뀌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까지 더해져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기질과 관련해 ‘긴급’, ‘긴급제출’, ‘필독’이라는 머리글을 달고 오는 공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수업시작 종소리 앞에서 행정보고와 교실 수업 사이에서 교사를 머뭇거리게 만든다”며 “학교 현장에 쏟아지는 업무 폭탄은 갈등과 불만을 터져 나오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기정화기의 특성상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고려해 다른 시·도교육청이 렌탈 형식으로 공기정화기를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고려 않은 채 시교육청은 시간에 쫓겨 무조건 구매만 강요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문만 25건만 달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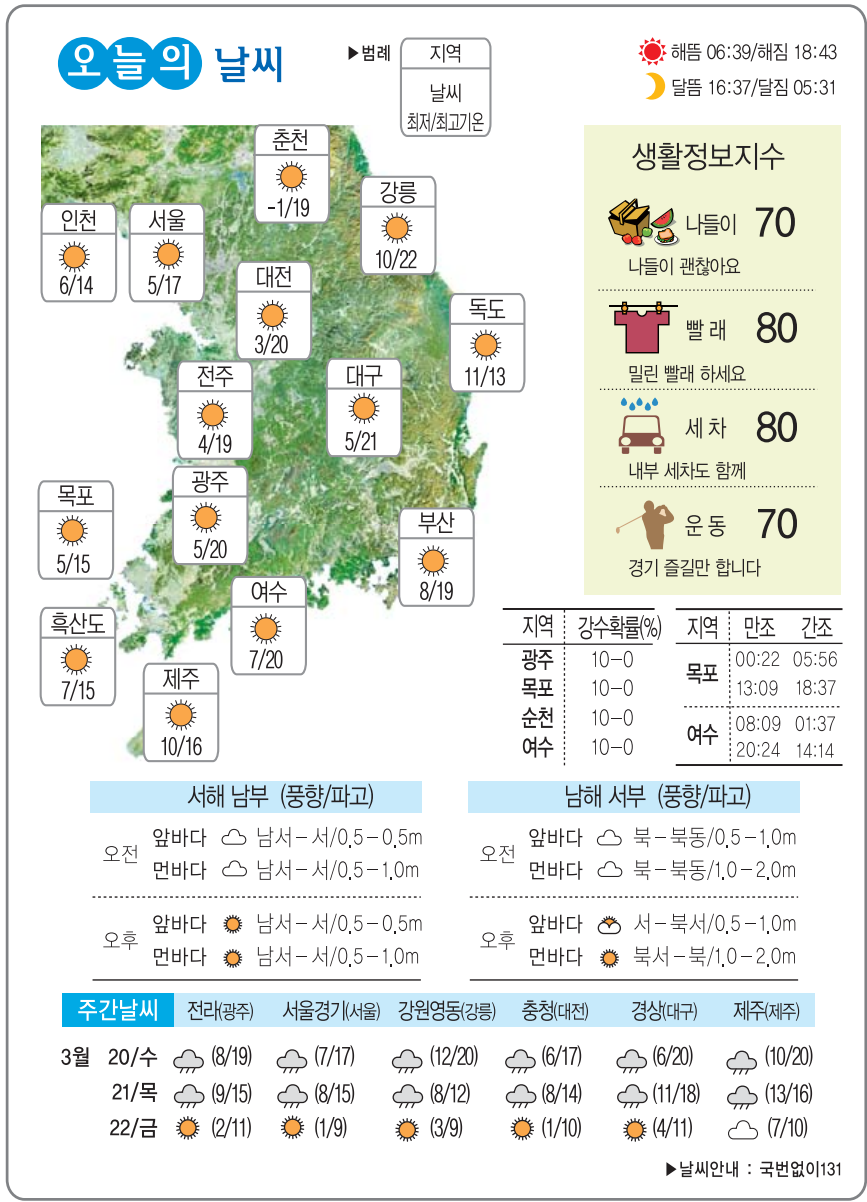
지부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과의 수업, 생활지도, 상담으로 눈코 뜰 새

없는 교사들에게 막대한 행정업무를 떠넘겨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능하고 철학 없는 교육행정에 대한 사과를 장휘국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1, 2월 공기정화장치 구입의 적기를 놓치고 미세먼지 가득해진 3월에야 학교 현장으로 책임을 떠넘긴 담당자 문책과 함께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에 비춰 교육청이 책임지는 행정과 학교 렌탈 방식 도입 등도 주장했다.

한편, 광주 모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하학년(1·3학년) 교실 설치용 공기정화장치 예산 배부 당시 공기정화기를 교장실, 행정실 등 학교 관리자 사무실에 설치했다가 항의 민원을 받고 옮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교육청의 관리 또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김종민기자



광주매일신문 기사 제보 jebo@kjdaily.com

광산구, 미세먼지 통합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KT전남본부와 오늘 업무협약

광산구가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미세먼지 잡기에 나선다.

광산구는 19일 구청에서 KT 전남본부(본부장 오기섭)와 ‘미세먼지 통합환경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광산구는 KT가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정보·시설을 공기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협약에 앞서 지난달 15일 광산구는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19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공기정화 기술개발 및 경제생활 SOC 구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사업’을 신청했다.

이 사업은 광산구 소재 기업 및 지역 산학기관과 함께 2019~2021년 3년간 18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공기정화 기술 개발 ▲시범 실증단지 구축 및 검증 ▲공기산업 특화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 미세먼지에 대응

하고 공기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달 초 균형발전위 시범사업에 광산구가 최종 선정되면 KT는 광산구와 실의 공기 질 측정기, 관제 솔루션 등 서비스플랫폼 정보를 공유한다.

또 빅데이터 분석 예측 자료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산구의 시범사업 계획이 더욱 타당성을 얻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상호 광산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를 잡아 시민 삶을 안전의 반석 위에 놓고 공기산업도 육성해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 창출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균형발전위 시범사업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가 27개 사업을 접수했다. 지자체가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으면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역발전투자협약이다.

/광산=고윤석기자

광주 도심 곳곳 ‘인형뽑기방’ 잇따라 털려

‘인형뽑기방’ 내부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털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사건들이 광주 도심 곳곳에서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공구를 이용해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만 된 현의(투수절도)로 카자흐스탄 국적 자모(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씨는 지난달 16일부터 3월5일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 인형뽑기방 3곳에서 공구를 지폐교환기 틈새에 집어넣고 훔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인 자씨는 스포츠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씨는 같은 국적의 20대 남성과 함께 범행했으나,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것

으로 조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도 이날 인형뽑기방에서 금품을 훔친 윤모(16)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군 등 2명은 지난 12일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광주 동구와 북구 인형뽑기방 5곳에서 공구로 지폐교환기를 부수고 27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광주 남부경찰서도 인형뽑기방에서 인형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15)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군은 지난 2월20일과 3월10일 심야시간대 광주 남구의 한 인형뽑기방 창고에 보관 중인 열쇠로 지폐교환기를 열어 인형과 현금을 훔치고, 피규어와 인형을 가져갔다.

/오승지기자

영산강환경청 “죽산보 해체 논의 밀어붙이기 없다”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18일 “죽산보 해체 논의에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 해체와 준치를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한 만큼 두루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영산강 보 관리 방향을 핵심으로 내건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죽산보 해체 방

안을 두고 오는 6월까지 폭넓은 여론수렴을 이어간다.

보 처리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해 양수장을 전면 정비하고 지하수 공급 대책을 세운다. 황포돛배 선착장은 죽산보 하류 지점인 원래 자리로 옮기도록 예산 17억원을 확보했다.

기획위가 해체를 제안한 죽산보 처리 방안은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출범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문철현기자